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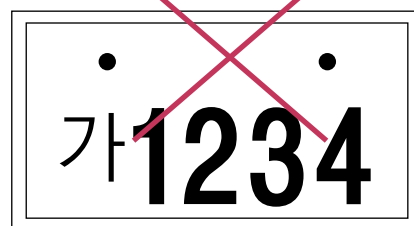
133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지역번호판, 이사 후에도 꼭~ 사용해요!

“바쁜 직장생활 중 따로 시간을 내 교체비용까지 부담하며 꼭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까?” 서울에 살던 K씨는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았단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의 녹색 지역번호판을 흰색의 전국번호판으로 바꿔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진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 소유자는 주소 변경 시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번호판을 전국번호판(○○가○○○○, 흰색)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와 직장생활 등으로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해 K씨처럼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를 폐지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원 절감,
과태료 최대 246억원 부과 방지



개선 전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 시 번호판 교체 필요
미 교체 시 과태료 부과

개선 후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시도로 이사해도 기존 번호판 계속사용 가능

과태료 부과 폐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14.10월)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요일제 스티커 없다고 출입금지 당할 걱정 없어요!

“바쁜 와중에 잠시 짬을 내 구청에 들른 건데, 요일제 스티커가 없단 이유로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을 헤맸네요. 요일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급한 민원이 있는 시민을 무조건 막아서는 건 너무하군요.” 직장인 H씨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출장차 여권을 갱신하러 구청에 갔다가 입구에서 출입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과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에 대해선 요일제 적용을 면제해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개선 전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승용차 요일제 적용
- 예외 :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개선 후

공공기관 출입 민간 차량에 대해선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산업부, '14.6월)

우리 아이 게임 시간, 대화로 풀어요!

“주말 밤엔 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좋다고 부모님께 허락도 받았는데, 청소년이라 그럴 수 없는 게 답답해요.”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중학교 2학년 H군의 말입니다. 이제 ‘부모선택제’ 덕분에 H군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H군이 주말 새벽엔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도록 H군의 부모님이 게임회사에 요청한 것입니다. H군은 방학을 맞으면 게임시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부모님과 다시 한 번 대화 후 결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요청하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선택제’가 도입된 후 가정 내에서 게임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부모의 교육권 · 양육권 강화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 양자의 조화



개선 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는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

개선 후

부모(친권자) 요청 시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가능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제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단계를 거친 후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처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여가부, '14.11월 제출)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3)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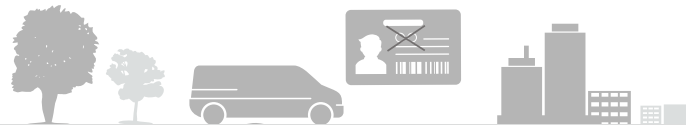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숫자로 대체

불필요한 지역 표시는 이제 그만!

“어머, 과장님 경상도 분이셨네요?” 업무 차 거래처 직원을 동승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Y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검문이 있어 잠시 운전면허증을 꺼냈다 넣었을 뿐인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출신지를 짐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운전면허증 첫 줄에 큰 글씨로 지역 표기가 돼 있어서 언뜻 보고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역만 경북일 뿐, Y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온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 상단엔 ‘서울 00-000000-00’과 같은 형태로, 면허를 발급받은 지역명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유발되거나 면허 취득지역이 출신지와 달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기를 폐지했고, 새롭게 바뀌는 면허증엔 ‘서울’과 같은 지역명이 숫자로 표기됩니다.



• 지역감정 유발방지로 인한 사회 대통합 기여 등 국민편의 증진



개선 전

운전면허증에 면허취득 지역 표기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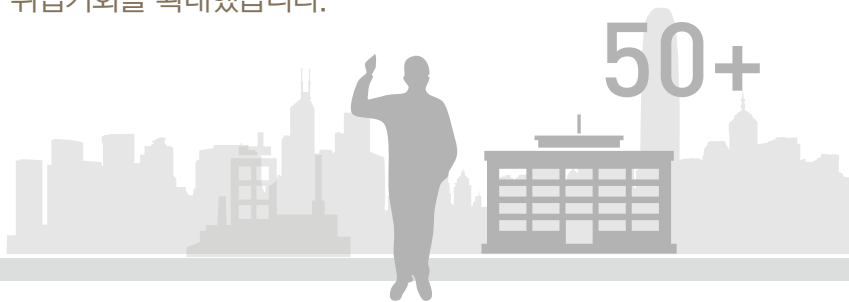
지역을 숫자로 대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경찰청, '14.7월)

인생은 50부터, 이제 나도 청원경찰!

50대 퇴직자 N씨는 아직 활기가 넘칩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새로운 직업으로 인생 제 2막을 열고 싶습니다. 주요시설의 청사방호 등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업무에 관심이 생겼지만, 50대란 이유로 도전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제 N씨에게도 청원경찰이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청원경찰 임용 연령 규제가 사라진 덕입니다. 청원경찰은 기관이나 사업장에 배치돼 감시단속 및 경비업무를 합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연령이 5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50세 이상 시민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규제 폐지를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규제폐지 후 임용된 청원경찰 총 47명

현재 청원경찰 총 인원이 1만3,308명으로 현재의 50세 이상 임용 추세가 지속·확대될 경우(전체 임용자 중 약 8.6%) 97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개선 전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연령을 50세미만으로 제한

개선 후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 폐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경찰청, '14.3월)

문의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756)